

# 광주 최대 성과 잇는다…2027년도 ‘국비 4조 시대’ 도전

AI·미래차 등 핵심사업 발굴 집중…정부 기조 맞춰 선제 대응

광주·전남 통합 연계 사업 등 메가시티 구축 재원 마련 ‘총력’

광주시가 2026년도 국비 3조9497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여세를 몰아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치밀한 논리 개발과 선제적 대응으로 ‘국비 4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광주시는 18일 ‘2027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비 확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5·18 관련 예산을 대거 반영시키며 전년 대비 16.6%(5639억원) 증가한 3조9497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의 판도를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돼 ‘부강한 광주’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시는 2027년도를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결실을 맺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고히 하는 해로 삼

아, 연초부터 체계적인 국비 확보 전략을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고성과 사업에는 집중 투자를, 성과 사업에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예고했다. 또한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 제도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흐름을 읽고 ‘사업 발굴, 선행 절차, 국비 활동’의 3박자를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단순한 단발성 사업보다는 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로봇, 이차전지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전략 사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두 지역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 사업 발굴에도 공을 들인다.

대표적으로 광주 신산업선,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광주~전주) 건설 사



디지털 합성 이미지.

증하고 논리를 다듬는 작업이 이뤄진다.

각 실·국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은 기획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설득 작업에 나선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최소 2년 전부터 기획에 착수해 사전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부진하면 다음 연도 예산 반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국별로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 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 말까지 모든 국비 신청 사업을 확정해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기재부 심의 기간에는 광주시 주요 인사들이 세종시를 찾아 막판 예산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빽빽하게 운용되는 만큼 광주만의 차별화된 논리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으면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업 등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중으로 실·국별 국비 확보 세

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한다. 시장 또는 부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 보고회에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

## 박병규 구청장 징계 요구…선거 앞두고 정치적 공방?

광산구 시설공단 노조, 민주당에 ‘노조 탄압’ 진정서 제출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 측은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수년 전 사안을 당내 경선이 암울한 시점에 터뜨린 것을 두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흡집 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단 노조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에 박 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구청과 광단 측이 법원과 노동위원회, 국

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한 채 특정 노조원을 표적으로 삼아 감사를 벌이고 징계를 남발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징계가 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사법·행정적 절차를 거쳐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본선이나 다른 없는 오는 3월 민주당 경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한다는 점에서 노조가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당의 감찰 기능을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보기엔 시점이 묘하다”며 “경선 국면에서 현직 구청장에게 도덕적 흠집을 내 경쟁 구도를 훈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비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산구와 광단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노조의 주장이 전제 구성원의 뜻이 아닌 일부 강성 노조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와 징계는 경영 정상화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CCTV 감시 등 인권 침해 주장 역시 관계 기관 조사를 통해 이미 소명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기관 모집

30일까지 신청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미래 농업의 새로운 부가 가치로 주목받는 ‘치유농업’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교육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센터는 오는 30일까지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치유농업사는 농업·농촌 지원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회복을 돋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양성기관은 예비 치유농업사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2급 치유농업사는 향후 현장에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유 농장 등 관련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치유농업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실습 자재 등 인프라를 갖추고, 전문성을 담보할 교수 요원을 확보한 대학이나 대학 부설 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센터 치유농업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편성의 적절성과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살피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운영 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명절 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

19~30일 마트·전통시장 등서

광주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례상을 차릴 수 있도록 성수 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부터 30일까지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성수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사반은 관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식품 제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유통 중인 제수 용품과 선물 세트,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즉석 식

품 등을 무작위로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주요 검사 항목은 겉보기와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 색소나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의 적정 사용 여부다. 또 육류 등에서 검출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과 식중독균,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 포함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적합 식품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관할 부서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한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농민수당 60만원 지급…8500가구 혜택

내달 2일~3월 13일 접수

광주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돋기 위해 올해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2026년도 농민공익수당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지역 농가에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지급 규모는 총 8500농가이며, 사업비는 시비 41억 3000만원과 구비 10억 2000만원을 합해 총 5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

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가족 및 곤충 사육 농가가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7일경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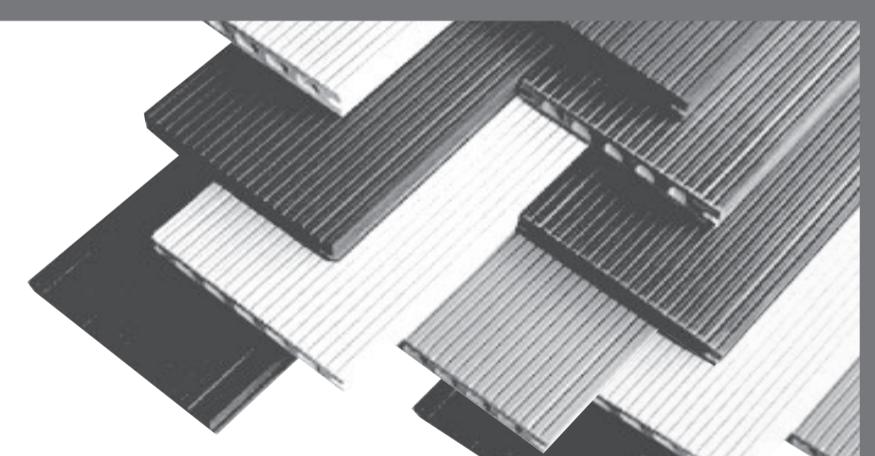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만원권 광주선불카드 2매로 일시 지급된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산구가 4280농가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북구 1790농가, 남구 1510농가, 서구 730농가, 동구 190농가 순으로 집계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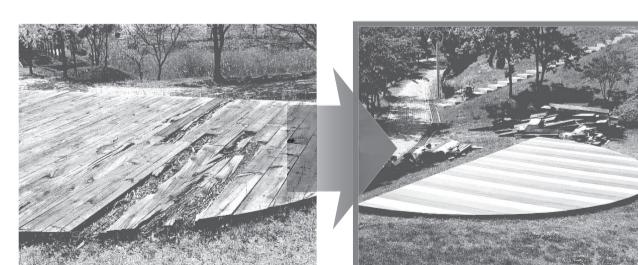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 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 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 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